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무역 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무역 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목 차

제1장 조사 배경	6
제2장 트럼프 행정부 100일 정책 추진 경과	7
제3장 주요 무역 정책 추진 동향	10
제1절 상호관세	10
제2절 IEEPA 기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15
제3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19
제4절 자동차 232조 관세	21
제5절 반도체 정책 및 규제 동향	24
제6절 조선업 부흥 정책 및 301조 조사	28
제7절 기타 품목 232조 조사	31
제4장 현지 반응 및 시사점	39
제1절 현지 반응	39
제2절 현지 기관 평가	42
제3절 시사점	44

요 약

미국 우선주의 강화, 글로벌 무역질서 개편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취임 후 100일간 129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무역정책을 포함한 주요 경제정책을 신속히 집행했다. 제조업 리쇼어링, 공급망 재편, 에너지 자립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 중심의 경제 구조 재편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전통 제조업 부활과 대중 무역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관세 부과와 제재를 통해 통상 압박에 나섰다.

관세 조치 이후 미국 내외에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 성장 둔화, 글로벌 공급망 충격,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100일간의 무역 정책 추진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상호관세 부과, 관세를 통한 협상지렛대 구축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인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흑자 상위국에 대해서는 추가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84%의 관세율을 125%로 대폭 인상하고, 비관세 장벽과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동맹국들과의 협상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고 양자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유연한 전략을 병행했다.

IEEPA 기반 긴급관세 부과로 북미 및 중국 겨냥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했다.

요 약

232조 조사를 통한 전략산업 보호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확대했다. 철강·알루미늄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나아가 반도체, 구리, 목재, 의약품 등 전략 품목 전반으로 232조 조사를 확장해 국가 산업기반 보호에 주력했다.

301조 조사를 통한 중국 조선업 견제 본격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조선산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건조 및 소유 선박에 대해 항만 이용료 부과를 추진하고, 항만 하역 장비에 대해서는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경제성장 둔화 및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았다. IMF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으며, 글로벌 성장률 역시 2.8%로 낮췄다. 현지 기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해 평균 소비자물가가 4.6%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실질 구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대응 필요성 대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비용 증가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기업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들이(자동차,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됨에 따라 주요국 관세 및 수입 규제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은 물론 미국 내 수입품 수요 위축을 대비해 새로운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상품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기업 대상 공급망 및 원산지 규정 강화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미국산 조달 계획 수립 및 원산지 검증 절차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서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모두의 기술 경쟁력 제고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

조사 배경

□ (조사 배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및 미국 우선주의 기조 회귀 선언

-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제조업 약화, 경제적 불균형, 국가안보 위협 등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 강조
 - ① 국경 보안 강화, ②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③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④ 미국의 가치 회복 등 4대 정책 우선순위 제시
 - 취임 직후 약 100일 동안 143건의 행정명령, 40건의 포고령, 37건의 각서를 신속히 발표하며 신정부 정책 기조 구체화(4.29. 기준)
- * △경제 활성화, △제조업 강화, △에너지 독립, △보호무역 강화, △중국 견제 등

□ (조사 목적)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무역 정책 추진 동향 점검

-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4.30.)을 전후로 미국 무역정책의 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 도출
 - 특히, 주요 무역 조치 및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을 중점 점검, 유의미한 시사점 제공 목적

□ (정책 기조) 불공정·불균형 무역에 대한 적극 대응과 자국 산업 보호 최우선의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추진

- (관세 및 무역조치) 보편 및 상호관세 부과, 주요국 대상 추가 관세 적용 및 검토 등 대대적인 관세 정책 추진
- (공급망 재편 및 대중 견제) 중국에 대한 경제·무역 관계 재검토, 첨단기술 수출통제 강화, 기업 제조업 회귀 유도 등 미국 중심 재편 추진
- (행정조치 중심 정책 집행) 의회 견제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행정 수단을 적극 활용

II

트럼프 행정부 100일 정책 추진 경과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신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시행 본격화

- (무역) 트럼프 대통령,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수립¹⁾을 위한 권고안 마련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외 무역 시스템 개혁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주요 부처에 △불공정·불균형 무역 관행, △대중국 경제·무역 관계 재검토, △경제 안보 등 주요 현안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권고안 지시(1.20.)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권고안(4.3.)】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국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촉진은 물론,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하고 시장 접근, 최소 관세 면제, 수출통제, 해외 투자 제한 등 폭넓은 정책 추진 권고 (☞ 링크: [미국 우선 무역정책 권고안 요약본](#))

- 관세 체계의 광범위한 재조정*(국가별, 산업별, 품목별)을 통해 무역적자 축소**,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 철저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외무역시스템 개혁
 - * ① 캐나다·멕시코(25%)(USMCA협정에 따라 일부 품목 관세 유예 조치 적용), ② 중국에 고율 관세(145%), ③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 대상 보편관세(10%), ④ 국가별 상호관세, ⑤ 전략 품목(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 ** 1조 2,000억 달러 무역적자 축소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 정책 시행
- (제조업) 제조업 리쇼어링, 미국 노동자·자국 산업 보호를 중심으로 핵심 산업의 공급망 해외 의존도 축소 및 미국 산업 역량 강화 추진
 - 미국은 생산·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제조업 세금 감면, △공장 인허가 간소화, △전략 품목(반도체·배터리) 생산 이전 인센티브 추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25%), 철강(25%), 알루미늄(10%→25%) 관세 인상 추진
 - * 1월 취임 이후 345,000개의 일자리 창출, 9,000개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백악관, 4.29.)

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 **(대외경제) 관세 정책 강화를 통한 무역 불균형 및 무역적자 축소 노력**
 - △무역적자 축소 및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 경제·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정책 재정립, △관세 징수를 위한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 관세 인상을 통한 재정 적자 해소, △미국 내 대규모 프로젝트 민간 투자* 유치
 - * Stargate AI 프로젝트 (5천억 달러), 애플(5천억 달러), 엔비디아(5천억 달러), 현대(2백억 달러) 등 취임 후 총 5.2조 달러의 미국 투자 확보(4.25 기준), 최소 426,0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²⁾
- **(내수경제) 인플레이션 완화 및 생활비 절감 노력**
 - 인플레이션 완화 및 생활비 절감을 위해 긴급 가격 감면 행정명령³⁾ 발동
 - * 식품, 에너지 가격 안정화로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월 2.8%→ 3월 2.4%로 완화(4.10. 기준)
 -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도모, 처방약 인하 행정명령⁴⁾ 발동으로 메디케어 소비자 부담 완화(처방약 가격 2% 이상 하락)
- **(정부 개혁)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회복, 불필요한 연방 지출 절감 노력**
 -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신설을 통해 △정부 재정 및 조직 축소, △연방 지출의 구조적 절감*, △불필요한 기관 통합·폐쇄, △업무 효율성 극대화, △대외원조 기관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 전면 개편, △DEI 프로그램 중단 등 대대적 정부 개혁 추진
 - * DOGE 사이트에 따르면, 정부 개혁을 통해 총 1,600억 달러의 연방 지출 절감 (4.22 기준)
- **(외교·안보) 미국의 영향력 확대, 리더십 복원, 국익 중심 외교 안보 전략 확립**
 - △미국 인질 석방 신속 추진, △러·우 사태 중재 노력, △OECD 글로벌 세금 협정 효력 무효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이란 압박 강화
 -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그린란드 매입 및 파나마 운하 환수 추진, 멕시코만→미국만(Gulf of America) 명칭 변경 포고문⁵⁾ 선언

2)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3/50-wins-in-50-days-president-trump-delivers-for-americans/>

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livering-emergency-price-relief-for-american-families-and-defeating-the-cost-of-living-crisis/>

4)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lowering-drug-prices-by-once-again-putting-americans-first/>

- (에너지·환경)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⁶⁾, 화석 연료 생산 확대 및 미국 내 광물 생산 촉진⁷⁾ 등 다수의 행정명령 발동
 - △화석 연료 생산 확대, △에너지 규제 완화, △ 바이든 행정부 친환경 정책 철회, 그린뉴딜 폐기, △풍력 프로젝트 취소, △전기차 의무화 폐지,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알래스카 천연자원 개발 및 LNG 프로젝트 승인, △미국 광물 생산 촉진, △미국 해양 광물 자원 개발⁸⁾ 추진
 - * 내무부, 아메리카 만의 석유 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증대하는 신규 해양 시추 정책 발표 (4.24.)
 - 국가 에너지 지배위원회(National Energy Dominance Council)⁹⁾ 신설로 에너지 지배력 확대 및 에너지 생산·유통 전반의 규제 개선 추진
- (국경·이민)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보안 강화,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신속 시행, 강경한 국경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 유입 방지
 - △불법 이민자 유입 방지를 위한 남부 국경의 비상사태 선언 △국경 수비를 위한 군력 배치, △ ICE(이민세관단속국)의 권한 강화로 대규모 불법 체류자 체포·추방 작전 전개 △난민 정착 프로그램 중단
 - * 불법 국경 통과는 지난 2월 대비 94%, 바이든 행정부 이래 최고치보다 96% 감소, 역대 최저 수준 기록, 일부 지역은 불법 국경 통과가 2023년 대비 99% 감소(백악관 3.10.)
 - △Laken Riley Act 입법을 통해 절도·폭력 혐의로 기소되거나 체포된 서류 미비 이민자 의무적 구금 의무화, △마약 카르텔의 테러 조직 지정 및 처벌 강화, △펜타닐 불법 유입 통제 및 단속 강화

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gulf-of-america-day-2025/>

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declaring-a-national-energy-emergency/>

7)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immediate-measures-to-increase-american-mineral-production/>

8)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unleashing-americas-offshore-critical-minerals-and-resources/>

9)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establishing-the-national-energy-dominance-council/>

III 주요 무역정책 추진 동향

1 상호관세

□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E.O.14257, 4.2.)

-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외국의 불공정, 불평등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정책' 도입
 - 상호주의에 기반한 공정 무역 실현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 △경제 성장 촉진 △무역 관계 개선 △자국 기업·노동자 보호 등 목적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 법률】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50 U.S.C. 1701) :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경제 제재 권한 수립
- 국가비상사태법(NEA, 50 U.S.C. 1601) : 대통령의 비상 권한 행사 절차 규정
- 1974년 무역법 604조(19 U.S.C. 2483) : 대통령의 무역 협상 및 관세 조정 권한 명시
- 미국 법전 3편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재 권한 확대

- **(조치)** 보편 관세와 상호관세를 병행 적용. (1) 모든 국가 대상 10% 기본 관세를 도입하고, (2) 대미 무역 흑자 상위국에 개별 상호 관세를 적용
 - **(보편)** 4월 5일부터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를 10% 적용
 - **(상호)** 4월 9일부터 총 57개국(부속서 I 포함)의 관세·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국별 차등 관세를 적용
 - * **한국 25%**, 베트남 46%, 미얀마 44%,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공 30%, 인도 26%, 말레이시아 24%, 일본 24%, EU 20%, 이스라엘 17% 등
- **(국가 면제)** 'IEEPA 국경 관세'가 적용 중인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수입품은 이번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IEEPA 국경 관세 명령*에 따라, USMCA 규정을 충족하는 캐나다 및 멕시코 상품은 관세 면제. USMCA 규정 미준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25% 적용(에너지 수입의 경우 10% 적용)

- * 미국 정부는 불법 마약, 이민, 에너지 문제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2월 1일 캐나다, 멕시코 및 중국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IEEPA 국경 관세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USMCA 규정 충족 상품만 상호관세에서 면제되고, 미충족 상품에는 상호 관세율 12% 적용
- 미국 품목분류(HTSUS) 상 Column 2로 분류된 국가¹⁰⁾(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쿠바 등)로부터 수입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품목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1) 50 USC 1702(b)¹¹⁾ 대상 품목(정보 출판물, 인도적 목적 식량, 의약품 등)
 - (2) 232조 관세 기존 적용 품목(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등)
 - (3) 부속서 II¹²⁾ 포함 품목(반도체, 제약, 구리, 목재, 에너지·광물 자원 등)
 - (4) 향후 「232조 관세」 적용 대상 품목
- **(미국산 콘텐츠 면제)** 수입 물품의 미국산 콘텐츠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미국산 비중을 제외한 외국산 가치에만 상호관세를 부과
 - * 미국 내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된 부품의 가치를 의미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해당 수입품의 미국산 구성 가치 및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를 검증할 자료 요구 권한 수립
- **(소액 면세)** 상무부의 관세 징수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기존 면세 최소 기준(Duty-free de minimis) 혜택은 잠정 유지
 - 단, 별도 발효된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으로부터 소액 수입품에 대한 면세 혜택은 중단
 - * 4.2.자 행정명령¹³⁾에 따라, 5.2. 부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저가 상품(800달러 이하)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종료.

10) https://www.help.cbp.gov/s/article/Article-1117?language=en_US

11)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50/1702>

12)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04/Annex-II.pdf>

13)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further-amendment-to-duties-addressing-the-synthetic-opioid-supply-chain-in-the-peoples-republic-of-china-as-applied-to-low-value-imports/>

□ 대중 상호관세 수정에 관한 행정명령(E.O.14259, 4.8.)

- 중국이 보복 대응을 예고함에 따라, 이전 행정명령(4.2.)으로 수립됐던 대중 상호 관세율(34%)을 50% 포인트 인상한 84%로 수정(4.9부터)
- 중국발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 대상 증가세(ad valorem duty)를 종전 30%에서 90%로 인상하고, 건당 부과하는 종량세(specific duty)는 2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5.2부터)
 - * 6.1부터 건당 부과하는 종량세를 150달러로 추가 인상

□ 상호관세 조치 연기에 관한 행정명령(E.O.14266, 4.9.)

- 4월 10일(美 동부 시간 기준)부터 발효 예정이던 상호관세 집행을 7월 9일 자정까지 90일 동안 일시 중지
 - 단, 4월 5일에 발효된 전 세계 대상 보편 관세 10%는 기존대로 유지
- 중국의 보복관세 예고에 따라, 이번 관세 집행 연기 조치에서 중국 제외
 - 4.10 부로 대중 수입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인상
 - * 대중 수입 누적 관세율은 합계 145% (상호관세 125% + IEEPA 국경 관세율 20%)
- 중국발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 대상 증가세를 종전 90%에서 120%로 인상하고, 건당 부과하는 종량세는 75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5.2부터)
 - * 6.1부터 건당 부과하는 종량세를 200달러로 추가 인상

□ 상호관세 면제 품목 확대를 위한 대통령 각서(4.11.)

- 지난 행정명령(4.2.)에서 규정한 상호관세 예외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세 예외 품목 추가 20종 공개¹⁴⁾
 - (대상 품목) 반도체 제조 장비,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
 - (적용 시점)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
 - * 수입업자는 ① 아직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unliquidated entries) 사후 정정 신고(post summary correction)를 통해 환급 요청 가능, ② 최종 관세가 확정된 수입(liquidated entries)에 대해 이의제기(protest)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출해 환급 요청 가능

14) <https://content.govdelivery.com/accounts/USDHSCBP/bulletins/3db9e55>

- 이번 상호관세 부과에서 제외된 품목은 추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

□ 중국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상호관세율 조정 관련 행정명령(5.12.)

- 대중 상호관세율 인하 (미 동부 기준 5월 14일부터)
 - (美 → 中) 미국의 對中 상호관세 34% 중 10%는 유지(baseline tariff), 24%는 90일간 유예
 - * 미국의 대중 관세는 기존 145%에서 30%로 변경(90일간)
 - (中 → 美) 중국의 對美 보복관세 34% 중 10%는 유지(baseline tariff), 24%는 90일간 유예
 - * 중국의 대미 관세는 기존 125%에서 10%로 변경(90일간)
- 중국발 소액소포 대상 종가세 및 종량세 인하 (미 동부 기준 5월 14일부터)
 - 종가세: (기존) 제품 가치의 120% → (수정) 제품 가치의 54%
 - 종량세: (기존) (5.2.~31.) 모든 우편물 당 100달러 부과
(6.1.~) 모든 우편물 당 200달러 부과
(수정) (5.14.~) 모든 우편물 당 100달러 부과

〈상호관세 조치 변동 사항〉

형태		행정명령(4.2.)	행정명령(4.8.)	행정명령(4.9.)	대통령각서 (4.11.)	백악관 브리핑 (5.12.)
관세율	보편	10%	-	-	-	
	상호	전 세계 : 차등	-	전 세계 : 90일 유예	-	
		중국 : 34%	중국 : 84%	중국 : 125%	-	중국 :10%(5.14.~) 34%(8.12.~)
면세 최소 기준	세계	특혜 유지	-	-	-	
	중국	종가세 : 30% 종량세 : (5.2부) 건당 \$25 (6.1부) 건당 \$50	종가세 : 90% 종량세 : (5.2부) 건당 \$75 (6.1부) 건당 \$150	종가세 : 120% 종량세 : (5.2부) 건당 \$100 (6.1부) 건당 \$200	-	
품목 면제	부속서 II	-	-	반도체,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 추가		

[자료] 백악관, 연방 관보 종합

□ 현지 반응 및 전망

- (업계) 비용 부담과 공급망 혼란 우려 속, 국내 제조업 부활 기대 교차
 - 미국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 비용 상승, 국제보복 관세를 유발하여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전미철강협회(AISI)와 전미노동총연맹(AFL-CIO) 등은 상호관세를 통한 국제무역의 공정성 회복으로 제조업 활성화와 노동자 권익 증진 기대
- (연구소) 관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 제기
 -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상호관세 정책은 비현실적인 경제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질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비판
 - 브루킹스 연구소는 무역적자 개선 효과보다 경기 침체를 유발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 경고
- (언론)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은 미국 내 산업 보호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 공급망 혼란, 소비자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주요국) 최근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대미 협상 전략을 다각도로 전개 중
 - 중국은 상호 존중, 정책 일관성, 협상 담당자 지정 등 협상 조건 제시¹⁵⁾. EU, 캐나다 등 협상 참여와 보복 조치 병행으로 협상 우위 전략 모색

1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4-16/china-open-to-talks-if-trump-shows-respect-names-point-person>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전략 분석〉

국가(지역)	대응 전략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관세 부과 : 농산물, 자동차, 화학 제품 등에 고율 관세로 대응 · 수출통제 : 핵심 광물, 소재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통제 정책 강화 · WTO 제소 : 미국의 관세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며 제소 · 중국의 이익에 반해 미국과 협상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 시사 · 장기적 경쟁 구도 속에서 협상과 대립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 관세 도입: 미국산 위스키, 청바지, 모터사이클 등에 상응 조치 · WTO 제소: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WTO에 공식 제소 · 외교 채널 강화: G7·G20 등 다자무대에서 미국 조치 비판 및 협상 시도 · 미국 내 기업 로비 활용: 자동차 산업 등 이해 당사자들과의 연대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칭적 보복 :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 등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 부과 · USMCA 조기 재협상을 통해 유리한 조건 획득 · 정치·외교적 공조 : EU, 멕시코 등과 공동 대응 모색 · 협상 참여 및 보복 조치 병행, 미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고려한 균형 전략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관세: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 농산물 중심의 보복 조치 · USMCA 적극 협상: 무역과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협상 수용 · 이민 문제 등 연계 이슈 분리 : 관세 문제와 다른 갈등 요소 분리 대응 · 경제 피해 최소화 우선, 대미 무역 의존도 고려한 유연한 협상 전략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면제 요청 : 철강·알루미늄 관세에서의 예외 인정 요구 · 미국과 무역 협상 개시로 양자 협의 채널 확보. · 기술·자동차 분야 방어: 자동차 관세 회피를 위한 외교적 노력 · 다자주의 재건 지지: CPTPP 다자 통상체제 강화 · 충돌 회피와 협상 선제 대응, 동맹관계 활용한 설득 외교 병행

[자료] 현지 언론보도 취합

2 | IEEPA 기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따라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E.O. 14193~14195) 발표(2.1.) 16
 -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25%(캐나다산 에너지 품목 10%),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2.4일부로 발효
 - 불법 이민·마약 차단, 펜타닐 등 불법 약물 유입 억제, 미국 제조업 기반 회복, 대미 무역적자 해소를 정책 목표로 설정
 - 멕시코발 불법 이민 및 마약 밀수, 캐나다산 저가 에너지·광물 수입, 중국산 펜타닐 유입 억제 등이 주요 정책 배경으로 작용
 -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미소기준(de minimis) 혜택 폐지 조치 명시
 - (캐나다·멕시코) 3.2일 자 행정명령(E.O.14226, 14227)을 통해 일시적 복원 조치(추후 상무부 장관 통보 시 폐지 예정)
 - (중국) 2.5일 행정명령(E.O.14200)을 통해 일시 복원되었으나, 5.2일 폐지(E.O.14256)
- 1개월간 관세 적용 유예 발표, 3.4일 발효(2.3. E.O.14197, 14198)
 - 양국의 국경 통제 협력 의사를 반영해 유예 결정, 미국은 이행 수준 평가 후 관세 지속 여부를 재검토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10%→20%로 인상 발표, 3.4일 발효(3.3. E.O.14228)
 - 기존 관세 조치에 더해 펜타닐 및 원료 화학물질 유입 차단 강화 목적

16)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ational-border/>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situation-at-our-southern-border/>

□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 조치 발표
(3.6. E.O.14231, 14232)

-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캐나다·멕시코산 포타시(칼륨비료)는 기존 25%→10%로 관세율 인하
※ USMCA 원산지 기준 미충족 시에도 인하된 세율 적용

□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 대한 미소기준 규정 중단 발표, 5.2일부로 발효
(4.2. E.O.14256)

- 미화 800달러 이하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 30% 관세 신고 및 납부 의무 부과
- 4.8일 행정명령(E.O.14259)으로 관세 인상 계획 수정, 5.2일부로 우편물 당 \$75, 6.1일부터 \$150의 종량세 또는 제품 가치의 90% 종가세 징수 가능
- 최종적으로 4.9일 행정명령(E.O.14266)을 통해 5.2일부터 \$100, 6.1일부터는 \$200 종량세 또는 제품 가치의 120% 종가세 징수 가능

〈對캐나다·멕시코·중국 IEEPA 관세 조치 일정〉

일정	미국 주요 조치
2월 1일	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 추가 관세 부과 발표 및 미소기준 혜택 철회 명시
2월 3일	對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1개월 유예
2월 4일	중국 추가 관세 10% 발효
2월 5일	중국 소액 수입품에 대한 미소기준 혜택 일시 복원
3월 2일	캐나다·멕시코 미소기준 일시 복원(추후 상무부 장관 통보시 폐지 예정)
3월 4일	對캐나다·멕시코 관세 발효 및 중국 관세율 20%로 인상
3월 6일	USMCA 원산지 기준 충족 품목 면제 및 포타시(칼륨비료) 관세율 10%로 인하
4월 2일	90일간 10% 기본 관세 부과 방침 발표(멕시코·캐나다에는 IEEPA 관세 제도 유지)
5월 2일	중국 미소기준 혜택 전면 폐지

[자료] 현지 언론보도 취합

□ 기타 내용

-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이 미국 내 자유무역지역(FTZ)로 반입되는 경우, 반드시 특혜외국지위(privileged foreign status)로 등록 필요*
 - * 등록 시점 관세율(추가 관세 포함) 적용
- 추가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미국 내 수출 시 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
- 미국 HS코드 98류(일시적 수입, 가공, 수리 목적 등) 품목 일부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단, 9802.00.40, 9802.00.50, 9802.00.60 등은 예외 없이 관세 부과 적용

〈對캐나다·멕시코·중국 IEEPA 관세 조치 세부 내용(4.9일 기준)〉

구분	관세율	내용
USMCA 원산지 기준 충족 품목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충족 시 관세 면제 • 단, '26.7.1 예정된 USMCA 재협상에서 원산지 요건 및 예외 규정 변경 가능성 존재
USMCA 원산지 기준 미충족 품목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미충족 시 25% 관세 부과 • 향후 규정 강화 가능성 고려 필요
캐나다산 에너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천연가스, 정제 석유제품, 우라늄, 석탄, 바이오 연료, 지열, 수력, 핵심광물 등 포함
포타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원료용 포타시 관세율 25%→10%로 인하
자동차 및 부품	기준 충족 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 4.3부터 기준 미충족시 25% 관세 적용 중 • 부품 : 5.3부터 기준 미충족시 25% 관세 적용 예정
중국산 일반 품목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일 10% 부과 발표 후 3.4일부터 20% 인상
중국산 소액 품목 (미화 800불 이하)	종량세: \$25 → \$100 → \$200 또는 종가세: 제품 가치의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일부터 미소기준 혜택 폐지 • 5.2~5.31일 : 우편물 당 \$100 종량세 또는 제품 가치의 120% 종가세 부과 • 6.1일 이후 : 우편물 당 \$200 종량세 또는 제품 가치의 120% 종가세 부과

[자료] 행정명령 및 관보 개재 종합

□ 현지 반응 및 전망

- Cato 연구소는 관세 조치가 미국 에너지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 경고¹⁷⁾
 - (캐나다) 미국 최대 전력·천연가스·석유 공급국으로, 관세는 수입 비용 증가와 공급 불안정 초래 가능
 - (멕시코) 미국의 멕시코산 천연가스 수출 의존도가 높아, 상호 보복 시 미국 내 에너지 수요 초과 및 가격 변동성 확대가 우려
- IMF는 관세 조치가 북미 및 중국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장률과 무역 흐름에 조정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¹⁸⁾
 - (캐나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1.4%로 하향 조정,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분석
 - (멕시코) 올해 성장률 전망을 -0.3%로 대폭 하향 조정, 미국의 제조업 공급망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수출 감소 및 투자 위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전망
 - (중국)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상호 보복 조치에 따라 중국의 소비는 기준 전망 대비 0.7%, 투자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Tax Foundation은 IEEPA 관세 조치에 따라 미국 GDP가 0.3% 감소하고, 미국 내 자본소득도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¹⁹⁾
 - 관세 부과로 향후 10년간 약 1,844억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기대되나, 관세에 따른 경제 위축을 반영 시 약 623억 달러의 세수 감소 가능성 제기
 -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와 수입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선택 폭 축소, 물가 부담 확대 가능성도 함께 제기

17)

https://www.cato.org/blog/eleven-charts-showing-how-canada/mexico-tariffs-would-harm-us-energy-industry-american-energy?gad_source=1&gbraid=0AAAAADusmufWphLiYbA0bS75pO743ucQ6&gclid=Cj0KCQjwzYLABhD4ARIsALySuCRaS-AvnXJj3Q8sFo2dEiu5RISTtaV6sKJ0bw4CTaRLmJBO-BFNEP0aAsSPEALw_wcB

18)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04/22/world-economic-outlook-april-2025>

19)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trade-war/>

3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 개요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수입 조치를 개정하는 포고문 제10835호 및 10896호를 발표, 3. 12일부터 발효(2.10.)²⁰⁾
 - '18년부터 적용되던 캐나다, 멕시코, EU, 영국 등 예외국 대상 협정을 종료하고, 해당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 전면 적용
 - 중국발 공급 과잉, 우회 수출, 면제 제도 활용 등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차단하고,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 및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시행

□ 세부내용

- (관세율)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 철강은 기존과 동일하게 25% 관세 유지, 알루미늄은 기존 10%→25%로 인상
 - 러시아산 및 러시아산 혼합 제품은 기존대로 200% 관세 적용
- (적용 범위) 파생상품 및 HS코드 외 제품까지 관세 적용 확대
 - 철강·알루미늄 외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도 포함*
 - * 미 HTS 코드 8~10단위 기준 철강 167개, 알루미늄 89개
 - HS코드 73류(철강)·76류(알루미늄) 외 제품에도 관세 적용
- ※ 단,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 부분에만 과세
 - 미국 내 제강(melted and poured) 또는 제련·주조(smelted and cast)된 후 타국에서 가공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 (면제 제도) 기존 면제 체계 전면 종료
 - 국가 예외, 쿼터, 일반 승인 면제(GAEs), 미국 생산 부족 품목 예외 등 모두 폐지
 - 단, 기존 승인된 제품은 유효기간 및 수량 내에서만 인정, 신규 신청은 불가

20)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justing-imports-of-steel-into-the-united-state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justing-imports-of-aluminum-into-the-united-states/>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세부내용 요약〉

구분	내용
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 25% 유지 • 알루미늄 : 10%→25% 인상 • 러시아산(혼합 포함) : 200% 유지
적용 범위 및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 HS코드 외 제품에도 적용 확대, 성분 비중에 따라 부과 • 미국 내 제강/제련·주조 후 타국 가공 제품은 예외 인정
면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예외, 쿼터, 일반 승인 면제, 제품별 면제 모두 종료 • 기존 승인분만 유효기간/수량 내 인정, 신규 신청 불가

[자료] USTR

□ 현지 반응 및 전망

- S&P Global Ratings는 동 조치로 인해 미 수입업체의 세금 부담이 약 11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²¹⁾
 - 전체 평균 관세율이 2.33%→ 2.67%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
 - 개인소비지출(PCE) 기준 물가지수가 약 0.037% 상승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
- BCG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수입 비용이 총 5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²²⁾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동 조치가 국제무역기구(WTO) 규범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²³⁾
 -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향후 타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
 - 국제 무역 질서 훼손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통상 리스크 확대 가능성 제기

21) <https://www.spglobal.com/ratings/en/research/articles/250212-economic-research-announced-steel-and-aluminum-tariffs-would-mean-little-change-for-u-s-gdp-and-prices-bigg-13413112>

22) <https://www.bcg.com/publications/2025/us-tariffs-steel-aluminum-analyzing-impacts>

23) https://www.piie.com/blogs/trade-and-investment-policy-watch/2018/trumps-steel-and-aluminum-tariffs-how-wto-retaliation?gad_source=1&gbraid=0AAAAADHO67Xgb-gl2GWeLgakV9Unn_fLR&gclid=Cj0KCQjvzYLABhD4ARIsALySuCSl6VIBuqQ0qAeZb7WZLGwUgLL65RBgVFKY0CUKgtVsY_dikgpWrsaAhBHEALw_vcB

4 | 자동차 232조 관세

□ 개요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3.26일,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치를 수정하는 대통령 포고문 발표
 - 무역법 제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련 품목 수입 조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자동차 제조 설비 구축을 위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일시적 면제 검토 중이라고 언급(4.14.)²⁴⁾
 - 자동차는 '25년 4월 3일, 자동차 부품은 '25년 5월 3일부로 관세 적용, 해당 조치가 감축, 수정 또는 종료되지 않는 한 유지
-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자동차 및 부품 대상 관세 체계 구축 필요성 부상²⁵⁾
 - 현재 판매되는 차량 중 약 50%만이 미국 내에서 생산,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 기반 약화와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로 작용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우회 방지와 국가 안보상 위협 해소를 위해 대상 부품 식별과 관세 부과 절차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 USMCA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및 부품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 안보 위협 해소를 위해, 관세 부과를 위한 체계 구축
 - 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적용으로 국가 안보 위협 요소 제거와 경제적 및 전략적 목표 설정
 - 자동차 산업 기반 구축 및 유지를 통한 제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추구

2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4-14/trump-floats-exceptions-for-auto-parts-facing-25-us-tariffs?srd=homepage-america>

25)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3/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djusts-imports-of-automobiles-and-automobile-parts-into-the-united-states/>

□ 세부내용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적용 차량의 미국산 부품 증명 요구 및 자동차 및 부품에 25% 관세 적용
 - USMCA 관세 혜택 적용 자동차의 경우, 수입업자는 제조 차량에 포함된 부품별 원산지 증명 문서를 상무장관에게 제출
 - 25% 관세는 승용차(세단,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 미니밴, 화물 밴)와 경트럭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엔진 및 엔진 부품, 변속기 및 파워트레인 부품, 전기 부품 등)에 적용
 - * 17개 차종 및 130개 자동차 부품
- USMCA 요건 충족 차량 부품에 대해서는 당초 상무부와 관세국경보호국(CBP)이 협의하여 비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관련 절차 마련 전까지는 관세 유예로 발표
 - '25년 5월 1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USMCA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발표
 - 미국 내 최종 조립된 자동차 대해 생산자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기준으로, 첫 해 3.75%, 2년 차 2.5% 한도 내에서 부품 관세 부담 완화 예정
- 백악관은 관세의 경제적 영향 및 생산 촉진 효과에 긍정적으로 분석²⁶⁾
 - '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는 △중국산 수입 감소, △관세 대상 품목의 미국 내 생산 촉진, △물가에는 매우 미미한 영향만을 미친 것으로 분석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3,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 백악관 참고 자료는 전 세계에 10% 관세 부과할 시 △미 경제는 7,280억 달러 성장, △280만 개 일자리 창출, △실질 가계소득 5.7% 증가할 것으로 분석

26)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3/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adjusts-imports-of-automobiles-and-automobile-parts-into-the-united-states/>

□ 현지 반응 및 전망

- 국제사회는 미국 자동차 관세에 우려 표명 및 대응 조치 검토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부품 제외)에 대응해 미국산 차량에 동일한 수준 관세부과 언급(4.3.)²⁷⁾
 - 유럽연합은 자동차 관세부과 결정에 유감 표명하며,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을 제시(3.26.)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에도 모든 국가에 일률적인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언급(3.27.)
 - 전문가는 관세로 산업 성장 저해·소비자 부담 증가·고용 감소 우려
 - 국제전략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가 업계 공급망에 충격을 주고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며, 보편 관세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 가치를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²⁸⁾
 - 피터슨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관세 조치 시행 시 미국 자동차 및 부품 산업 생산은 1.5% 감소하고, 1~3년 혹은 그 이상에 걸쳐 약 19만 5,000명의 미국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
 - 현지 언론은 자동차 관세로 인한 생산 위축·소비자 피해 발생 경고
 - 뉴욕타임스는 일부 완성차 업체가 특정 차종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잔존 차종에 대한 제조사의 가격 결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²⁹⁾
 - 로이터는 분석 보고서를* 기반으로 관세 조치가 '25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비용을 약 1,08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보도
- *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보고서에 따르면,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업체의 총 420억 달러의 비용 증가 예상, 미국 내 생산 차량 1대당 평균 약 5,000달러 상당의 수입 부품과 수입차 1대당 평균 약 8,600달러의 관세 부담 가중 전망

27) <https://apnews.com/article/canada-prime-minister-trump-trade-war-autos-d15ae5b0bab873450b86ca524afda3ca>

28) <https://www.csis.org/analysis/stacking-effect-trump-administrations-auto-tariffs>

29) <https://www.nytimes.com/2025/04/08/business/trump-tariffs-cars-auto-industry.html>

5 반도체 정책 및 규제 동향

□ 개요 및 동향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및 전자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수입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공표
 -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외국 무역관행 대응 목적으로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 개시
 -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은 일시적으로 관세에서 제외하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이후 “이들 제품도 곧 반도체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 언급³⁰⁾
- 한편,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반도체법(Chips Act) 관련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수정 및 재검토와 동시에 추가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 논의 진행 중
 - * 삼성전자 47억 4500만 달러(24.12.20 확정), SK하이닉스 4억 5800만 달러(24.12.19 확정) 등
 -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과 관련된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132억 달러, 칩 공급망 구축 5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 지원금으로 구성

□ 상세

- **(반도체법)**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재검토 및 추가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 논의 진행
 - CHIPS 사무국은 반도체법 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및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조건이 포함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자금 조달 계약에 대해 검토 진행³¹⁾

30)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4/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declares-national-emergency-to-increase-our-competitive-edge-protect-our-sovereignty-and-strengthen-our-national-and-economic-security/>

31) <https://www.reuters.com/technology/trump-prepares-change-us-chips-act-conditions-sources-say-2025-02-13/>

-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 일부 수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반도체법 내 핵심 지원 기능은 유지될 가능성도 관측³²⁾
- 반도체법 내 DEI 요건 제거, 환경 심사 간소화, 인력 관리 자율성 확대 등 기업 친화적 정책 검토 중, 세액공제 범위 최대 25% 확대 등 거론
-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TSMC와 유사하게 보조금 규모를 늘리지 않고 추가 투자를 확대하기를 희망³³⁾

*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5개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 등 총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3.4)

○ **(301조 조사)** 美 무역대표부, 중국 반도체 대상 무역법 301조 관련 2025년 2월 5일 까지 업계 의견수렴 진행

-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중국 반도체 분야 불공정 관행 및 보조금 조사 관련 업계 20여개 기관 의견 제출³⁴⁾
- 정부 간 협상을 강조하고 추가 관세 보다는 우방국과 협력 요청

* 소비자기술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컴퓨터·통신산업협회, 정보기술산업협의회 등

○ **(232조 조사)**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관세 조사(National Security Tariff Investigations)”를 통해 반도체 및 전자제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조사 개시 발표(4.14.)³⁵⁾

- 반도체 기관, 웨이퍼, 범용 및 최첨단 반도체, 미세전자,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제품 등 파생제품 대상 업계 의견 수렴 중

*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불명확(완제품 전체 부과 vs. 해당 완제품 내 수입산 칩에만 적용)

32)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5/03/tsmc-says-trump-wants-to-change-some-aspects-of-chips-law-and-export-policy-00258297>

33) <https://www.bgov.com/next/news/STBSD2T0G1KW>

34) <https://comments.ustr.gov/s/docket?docketNumber=USTR-2024-0024>

35) <https://www.npr.org/2025/04/13/g-s1-60086/semiconduct-tariffs-trump>

- (수출통제) 엔비디아의 H20 칩 중국 수출 시 별도 라이선스 요구(4.15.)
 - 美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H20 칩과 AMD의 MI308 칩을 중국 등 국가 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에 수출할 때 별도 수출 허가(라이선스)를 받도록 규제 강화
 - H20 칩은 미국의 기존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성능을 낮춰 중국 시장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이나, 동 조치로 대상에 포함
 - * 이번 규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한층 강화한 조치

□ 현지 반응 및 전망

- 미국 대중 첨단 반도체 규제 움직임 계속, 엔티티 목록도 추가 갱신
 - 산업안보국(BIS) 주도로 파운드리가 제조한 반도체가 중국 등 우려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화하고 제조사로 하여금 기업 조사 및 법인 등록 등 검증 책임 요건 강화
 - * 1.13일 바이든 행정부의 상무부 BIS의 신규 수출 통제(국가 등급별 판매 상한제)의 후속 조치 성격
 -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핵심 기술 분야 관련 엔티티 목록을 계속 추가 갱신하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제한 강화³⁶⁾
- 업계는 광범위한 조사 대상과 관세부과 우려에 반도체 및 전자제품 공급망 혼란 및 비용 상승 우려 증폭³⁷⁾
 -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관세가 신중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자국 반도체 생산과 첨단기술 개발 비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무역·세계 정책, 동맹국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 언급³⁸⁾

36) <https://www.aspistrategist.org.au/expect-stronger-export-controls-in-trumps-second-term/>

37) <https://www.nytimes.com/2025/04/14/business/economy/trump-semiconductor-tariffs-china.html>

38) <https://www.semiconductors.org/sia-statement-on-u-s-trade-policy/>

-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및 전자제품 가격 상승 전망,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들은 생산기지 이전 및 공급망 다변화 추진 중
- 미국 전자산업협회(IPC) 등은 “강력한 미국 전자산업을 위해서는 투자·인센티브와 더불어 상호 호혜적 무역정책이 병행되어야 하며, 무차별적 관세는 비용 상승과 생산 해외 이전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세가 실제로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³⁹⁾
- 업계는 자국의 제조업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시 공급망 혼란과 비용 상승 초래 우려, 단계적 도입과 일부 품목의 예외 적용을 정부에 요청 중
- AI 칩의 중국 수출 관련 무기한 제한 및 규제 움직임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 불가피⁴⁰⁾
 - 최근 규제 대상이 된 엔비디아의 H20 칩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에서 AI 모델 학습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중국의 슈퍼컴퓨터 구축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어 미국 정부가 규제 근거로 제시
 - 현재 중국은 자체 AI 칩 개발 및 공급망 자립을 추진 중이나, 아직 성능과 소프트웨어 호환성 면에서 엔비디아 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 현지 언론은 이번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경우,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중국 AI 칩 자립화가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고 평가

39) <https://www.reuters.com/markets/us/wall-street-reacts-trumps-reciprocal-tariffs-2025-04-02/>

4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4-15/nvidia-says-us-has-imposed-new-china-restrictions-on-h20-chips>

6 | 조선업 부흥 정책 및 301조 조사

□ 미국 신정부, 미국 조선산업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중국 해운·조선 산업 의존도 축소 및 규제 본격화

-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 중국 견제 및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⁴¹⁾ 발동(4.9.)을 통해 미국의 해양 패권 회복 및 조선업 부활 추진
 - ① 미국 해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전략인 해상 활동 계획(MAP:Maritime Action Plan) 수립, ② 국방물자생산법 기금 활용 및 해양 산업 공공 및 민간 투자 가능성 검토, ③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 조선산업의 불공정 관행 조사 및 권고안 지시, ④ 캐나다·멕시코 우회 외국 화물에 대한 항만료 징수 ⑤ 해양 안보 신탁기금 설립 등 지시
 - 또한, △동맹국·파트너 국가와 협력*을 통한 무역정책 조정, △상업용 선박 조선소 보조금 프로그램 입법 제안, △ 해양 산업 번영 특구(Maritime Prosperity Zone) 설립, △해양 인력 및 교육 지원, △군사 안보 강화를 위한 북극 전략 수립, △조달 절차 개선 및 규제 완화 등 포함
- ※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양산업역량국(Maritime and Industrial Capacity Directorate)를 신설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조선업 301조 조사)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를 완료하고 “중국의 해양 조선 진흥 정책 및 불공정한 관행이 미국 경제·기업·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라고 판정⁴²⁾
 - * (“24.4.17.) 조사 개시 → (“25.1.16.) 조사 결과 발표 → (“25.3.24./26.) 공청회 → (“25.4.17.) 최종 조치 발표
 - USTR은 1년간의 301조 조사, 공청회를 통한 공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중국 소유 또는 중국 건조 선박 대상 순 톤수에 기반한 항만료 부과 최종 조치⁴³⁾ 발표(4.17.)

4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4/restoring-americas-maritime-dominance/>

42)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2025/301%20Ships%20-%20Action%20FRN%204-17.pdf>

43)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Press/Releases/2025/301%20Ships%20-%20Action%20FRN%204-17.pdf>

- 중국 소유 및 중국산 선박대상 미국 입항 수수료 부과,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

【항만료 부과 방안】

- 중국 소유·운영 선박: \$50/순톤, 매년 \$30씩 인상해 2028년에 \$140/순톤
- 중국 건조 선박 운영자: \$18/순톤 또는 \$120/컨테이너, 매년 점진적 인상
-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150/CEU, 수수료 간 중첩 미적용

- 선박용 크레인 등 일부 항만 장비에 대한 관세도 함께 제안

- *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 중국산 컨테이너에는 20~100% 추가 관세부과 방안 제안, 5월 19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예정

- LNG 운반선 등은 3년 후부터 미국 내 운송 제한 단계적 도입

- * 전체 미국산 LNG의 1%를 미국산 선박으로 운송 의무, 2028년 4월 17일부터 적용, 2047년에는 15%로 의무 비율 확대해 외국산 선박의 미국 내 운송 제한

〈중국산 해운·물류 항만 장비에 대한 관세부과 품목 (HTSUS 코드 기준)〉

HTSUS 코드	품목 설명
8609.00.00	복수 운송수단에 적합한 특수 컨테이너(액체용 포함)
8716.39.0090	비동력 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 기타 차량 및 부품 등
8716.90.30	비동력 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 기타 차량 부품(주로 캐스터 등)
8716.90.50	비동력 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 기타 차량 부품(기타 부품)
8426.19.00	컨테이너 하역용 갠트리 크레인(선적 크레인 포함, 스프레더/트위스트락 등 결합장치 포함)

[자료] USTR

□ 현지 반응 및 전망

- (여론조사) 미국제조업연합(AAM)의 여론조사('25년 3월)에 따르면 미국인의 72%가 중국의 지배 대응 및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 세계 해운산업에 대한 중국의 통제와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 표명⁴⁴⁾

44) <https://www.reuters.com/world/most-americans-back-trump-push-rebuild-us-shipbuilding-better-compete-with-china-2025-03-21/>

-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국방 및 기술 센터 소장 브라이언 클라크는 "미국 조선소가 단순 투자만으로 한·중·일 조선소와 경쟁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미국산 선박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언급⁴⁵⁾
- (협회) 미 석유협회(API)는 미국산 LNG 운반선 활용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측에 서한 발송⁴⁶⁾
 - * 계획 준수를 위해 2029년부터는 미국에서 건조된 LNG 운반선이 나와야 하는데 미국 내 조선소가 그만큼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
- (업계) 중국 선박에 대한 운항료 부과로 단기적 물류비 상승 및 수출업계 부담 불가피,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 기대⁴⁷⁾
 - (조선·해운업계) 미국 내 조선 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대를 표명, 중국산 저가 선박 및 장비의 시장 지배력 견제에 환영 입장
 - * 반면, 세계해운협의회(WSC) 등 글로벌 해운업계는 "항만 이용료 부과는 소비자 가격 인상 및 미국 수출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
 - (수출업계) 항만료 및 관세 인상에 따른 물류비 상승 우려, 특히 수출기업은 비용 부담 증가와 공급망 차질 가능성 제기

〈미국 신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전략 및 지원 전망〉

- (1) **해군력 강화를 통한 조선업 활성화** : 미국 해군함정을 '54년까지 현재 296척에서 381척으로 확대 목표 (약 1조 750억 달러 예산 투입 예상)
- (2) **에너지 수출과 연계한 선박 수요 증대** : LNG(액화천연가스) 및 원유 수출 적극 추진. 에너지 수송 및 시추 목적 선박의 수요 증가 예상
- (3) **보호무역주의와 동맹국 활용** : 수입 규제 및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를 활용함과 동시에 동맹국 협력을 통해 기술력과 생산 역량 보완 강화 추진

<미 조선업 관련 주요 법규>

- (연안 무역법) 미국 건조·운항된 선박만이 연안 운송을 수행하도록 규정
- (반스-텔레프슨 법) 미 해군·상업용 선박의 자국 조선소 건조·수리 의무화 규정

※ 미국 의회도 각종 입법을 통해 행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 지원 전망

- 기존 법률 개정과 함께 'SHIPS for America Act'와 'Ensuring Naval Readiness Act' 등 신규 입법을 통해 조선산업에 대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자료] 코트라 '미국 조선산업 현황 및 우리 기업 진출 기회' 보고서 인용

45)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wants-activate-lagging-shipbuilding-industry-here-hurdles-he-faces?mssockid=24d158a3574067723d634df256cc666d>

46) <https://www.ft.com/content/bc632c27-b598-402d-b3bf-b0b87eda528e>

47) <https://insidetrade.com/daily-news/ustr-announces-tonnage-based-port-fees-chinese-ships>

7 기타 품목 232조 조사

<구리 232조 조사>

□ 조사 개요 [개시일: 2025.2.25., 2025.3.13.~4.1.(완료)]

- 구리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개시
 - 구리 및 파생 제품은 국방 분야, 사회 기반 시설, 청정에너지, 전기차, 첨단 전자기기를 포함한 신기술 등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광산 채굴, 제련, 정련 단계에서 외국산 구리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구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심각한 취약성 존재
 -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과 외국 시장의 조작 가능성에 대응하여, 무역법 제232조에 근거한 국가 안보 저해 여부 검토 절차 실시
- 백악관은 외국 공급망 의존과 외국 시장의 조작 가능성에 대응하여, 무역법 제232조에 근거한 국가 안보 저해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 지시
 - 트럼프 행정부는 안전한 국내 구리 공급망 확보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

□ 세부 내용

○ 조사 대상 및 내용

- 상무부는 구리 및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개시
 - * 구리 광물, 구리 정광, 정련 구리, 구리 합금, 고철 구리
- △ 미국산 구리 예상 수요, △ 주요 수출국 및 해외 공급망 역할, △ 공급망 리스크, △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 영향, △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 영향 여부, △ 외국의 수출통제 가능성, △ 수입 의존도 저감 방안, △ 관세 또는 쿼터 필요 여부 등 의견 요청
- 상무부 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권장 사항을 대통령에게 제출

□ 현지 반응

- 구리 포함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
 - 구리 산업 주요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보다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구리 광석 및 금속 수출 제한 요청⁴⁸⁾
 - 구리 생산 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은 구리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은 경제 성장 둔화, 광산 투입 비용 증가, 투자 가능 현금흐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 표명⁴⁹⁾
 - 현지 언론에서는 구리 관세 부과는 가전 및 전기차 등 주요 산업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및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⁵⁰⁾
- 미 상무부는 구리 수입 관련 의견을 수렴, 일부 단체는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촉구 의견 제출
 - 미 상공회의소는 구리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제련시설 투자, 세제 지원 및 인력 양성 정책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제기
 - 미 해양제조업협회는 구리 의존 업종에 대한 관세 완화 적용 기준 마련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내 투자 확대 및 무역 협정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 언급
 - 미 재활용재료협회는 재활용 구리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지하면서도 수출입 제한에는 반대하며, 재활용 구리의 무역 확대가 무역수지 개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

48) <https://finance.yahoo.com/news/us-copper-industry-seeks-export-110350871.html>

49)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chile-pushes-back-against-trump-copper-tariff-probe-2025-04-15/>

50) <https://apnews.com/article/copper-tariff-prices-ai-energy-china-trump-df365850cd0e9acb293d5b676f839e78>

<목재 232조 조사>

□ 조사 개요 [개시일: 2025.3.1., 의견수렴 기간: 2025.3.13.~4.1.(완료)]

- 목재 산업 공급망 취약성과 국가 안보 대응 전략 필요성 부상
 - 목재 산업은 목재, 제재목 및 파생 제품(종이 제품, 가구, 캐비닛 등)으로 구성, 건설업 등 주요 민간 하위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 미국은 '16년 이후 제재목 순 수입국이 되었으며, 외국산 제품 덤핑과 해외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취약성이 발생⁵¹⁾
 -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및 산업 지원 조치에 대응하여, 국가 안보 저해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무역법 제232조에 따른 조치 필요

□ 세부 내용

- 조사 대상 및 내용
 - 목재(가공되지 않은 나무), 제재목(판재나 널빤지),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국내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규제 지침 마련을 내무부와 농무부에 지시
 - △ 미국 목재 현재 및 예상 수요, △ 국내 목재 생산 수요 충족 정도, △ 주요 수출업체 및 해외 공급망의 역할, △ 외국 정부 보조금 및 무역 관행 영향, △ 국내 목재 생산 능력 확대 타당성, △ 현재 무역 정책의 영향, △ 관세 또는 할당량 등 추가 조치 필요 여부 등 관계자 의견 요청
 - 상무부 장관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정책 제안을 대통령에게 제출

51)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addressing-the-threat-to-national-security-from-imports-of-timber-lumber/>

□ 현지 반응

- 목재 관세는 주택 건설 비용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구조적 우려 제기
 - 주택 건설 업계는 연질 목재 및 기타 건축 자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주택 제공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 카토 연구소는 목재 및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는 품목 가격 상승을 초래, 이는 미국 주택 건설업자와 구매자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평가⁵²⁾
 - 미국행동포럼은 목재 산업의 하위 산업은 증가하는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삭감, 투자 및 연구개발 축소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분석⁵³⁾
 -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유림 절반을 벌목에 개방하는 명령이 환경 파괴, 생태계 훼손, 여가 활동 제약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⁵⁴⁾
- 미 상무부는 목재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단체의 우려와 함께, 관세 도입을 지지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병행 수렴
 - 미 상공회의소는 추가적인 목재·제재목 관세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외국 수입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국내 산업은 이미 무역구제조치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언급
 - 전미경재목협회는 수출 시장에 의존하는 협회 회원사는 외국의 보복 관세에 취약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정책의 초점을 해외 저가의 모조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경재목 제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
 - 미 목재연합은 캐나다산 목재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232조 관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52) <https://www.cato.org/blog/new-section-232-investigation-timber-lumber-wood-raise-prices-homebuilders-more-legal>

53) <https://www.americanactionforum.org/research/sector-specific-tariffs-estimating-the-costs/>

54) <https://www.cnn.com/2025/04/15/economy/next-round-of-tariffs-cost/index.html>

<반도체·의약품 조사>

□ 조사 개요 [개시일: 2025.4.16., 의견수렴 기간: 2025.4.1.~5.7.]

- 美 상무부의 반도체·의약품 국가 안보 영향 조사 개시
 - 미국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2025년 4월 1일부로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개시 발표
 -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외국 무역관행 대응 목적으로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 가능
 -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 여러 차례 표명,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르면 1~2개월(상반기) 내 관세 부과 가능" 언급

□ 세부 내용

- 조사 범위 및 대상
 - **(반도체)** 기판(substrate),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제품 등 파생제품⁵⁵⁾
 - **(의약품)** 완제의약품(제네릭·비제네릭), 원료의약품(API), 백신, 항생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주요 원료 및 파생제품⁵⁶⁾
 - 이해관계자(기업, 단체, 정부 등) 서면 의견 요청, 필요시 청문회 개최
- 조사 내용 및 절차
 - △ 미국 내 수요 및 생산능력, △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 외국 공급망 의존도, △ 소수 공급업체 집중 위험, △ 외국 정부 보조금, △ 불공정 무역관행, △ 수출통제 가능성, △ 관세·쿼터 등 수입 제한 필요성 등 관계자 의견 요청

55) Notice of Request, Semiconductor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링크)

56) Notice of Request, Pharmaceuticals and Pharmaceutical Ingredients) (링크)

- 4월 16일 관보 공식 게재 후 21일 간(5월 7일까지) 업계 의견 수렴
- 상무부는 5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70일 내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대통령은 90일 내 조치 결정

□ 현지 반응

- 반도체 업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급망 혼란과 비용 상승 초래 우려
 - 미국의 해외 반도체 공급 의존도(대만, 한국, 네덜란드 등) 지적, 관세 도입 시 생산 차질 및 가격 인상 가능성 지적(CNBC)
 - 관세가 소비자 가격 인상과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계적 도입과 일부 품목 예외 적용을 정부에 요청(로이터)
 - 실제 관세 부과 시, 대만(TSMC), 한국(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해외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가격 인상 및 마진 축소 압박과 네덜란드(ASML) 등 반도체 장비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위험 지적(블룸버그)
- 의약품 업계, 원료의약품(API)과 완제의약품 상당 부분 수입산 의존, 관세 부과 시 공급망 혼란과 비용 급증 우려
 - 업계 및 전문가들은 관세가 약가 인상으로 이어져 환자 접근성 저하, 의약품 부족 사태 심화 가능성을 경고, 단계적 도입·예외 적용 요구(CNN)
 - Merck & Co., Eli Lilly & Co. 등 세계 최대 규모 제약회사에 타격 전망, 관세 부과 시 기업 수익이 줄어 연구개발 인력 감축 예상(블룸버그)
 - 미국 제네릭의약품협회(Association for Accessible Medicines) 등, “관세는 이미 존재하는 저렴한 의약품 공급 문제를 악화시킬 것” 비판

<핵심광물 232조 조사>

□ 조사 개요 [개시일: 2025.4.15., 의견수렴 예정]

- 핵심광물 외국 의존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경제적·안보적 취약성 노출
 - 핵심광물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이며 정제된 핵심광물과 파생 제품은 미국 방산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핵심 구성 요소 활용
 - 미국은 핵심광물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경제와 국방 산업이 공급망 혼란과 경제적 압박에 취약한 상태
 - 공급망 취약성, 외국 시장 왜곡의 경제적 영향, 필수 자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공급 보장을 위한 무역 해결책 평가 추구
- 백악관은 제232조에 따른 핵심광물 수입 관련 조사를 상무부에 요청
 - 상무부 장관이 국가 안보 훼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4월 2일 발표된 기존 상호 관세를 대체할 예정
 - 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145%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7종*의 핵심광물 및 자석 수출 차단 발표 이후 공표
 - *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 상무부 장관은 90일 이내에 초안 보고서를 재무장관, 국방장관, USTR,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및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에게 제출하고, 270일 이내 최종 보고서 및 권장 사항을 대통령에게 제출

□ 세부 내용

- 핵심광물 조사 대상 및 내용
 - USGS가 발표한 '20년 에너지법(the Energy Act of 2020) 7002(c)조에 기반한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된 리튬, 니켈, 아연, 주석, 백금 등 특수 금속광물과 희토류 17개 원소*·우라늄 및 그 파생 제품도 포함
 - * '20년 4월에 미국 에너지부(DOE)에 의해서 발표된 보고서(Critical Materials Rare Earths Supply Chain)에서 식별된 17개 원소

- 금속, 금속 분말 또는 마스터 합금으로 변환되어 정제된 핵심광물 포함
- 핵심광물을 원료로 하는 반제품(반도체 웨이퍼, 아노드, 캐소드)과 최종 제품 (영구 자석, 모터,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마이크로프로세서, 레이더 시스템, 풍력 터빈 및 구성 요소, 고급 광학 장치) 등을 포함
- △ 핵심 광물과 파생 제품 수입량 및 수입국별 비율과 위험 유형, △ 수출국 경제, 가격, 시장 조작 전략과 영향, △ 글로벌 공급망 체계와 수요, △ 미국의 가공 능력, △ 총수입 규모 및 국가별 수출액 분석

□ 현지 반응

- 핵심광물 관세 부과 시 시장 불안정·공급망 경쟁 심화·가격 상승 우려
 - FT에 따르면 본 조사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핵심 산업의 통제권 회복 의도로, 핵심광물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 전쟁이 촉발될 가능성 시사
 - 블룸버그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 물가 상승, 국제 공급망 붕괴, 무역 감소로 인한 시장 불안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 침체 가능성 제기
 - 로이터는 새로운 광산 및 정제 시설 건설은 수년이 소요되기에, 관세가 부과될 시, 광물 수입국과의 협정 및 방안에 대한 우려 제기
 - 호주 희토류 관련 업체(ASM) 대표는 핵심광물 공급이 단일 국가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대체 공급망 구축 노력을 환영한다고 언급
 - 미국 자산 운용사(Cove Capital) 관계자는 핵심광물 전략적 비축, 광산 개발 권한 확보 및 파생 제품 제조업체와의 선점 적 공급 계약 체결 여부가 글로벌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IV 현지 반응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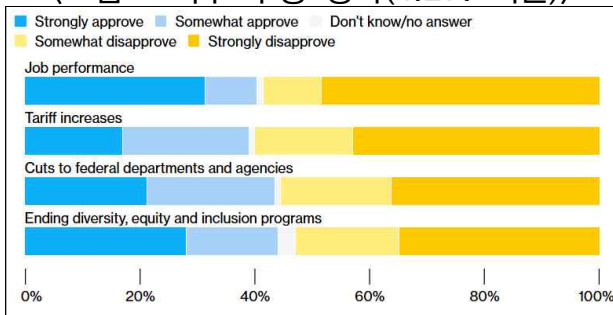
1 현지 반응

가. 여론조사 반응

□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직무 수행·경제·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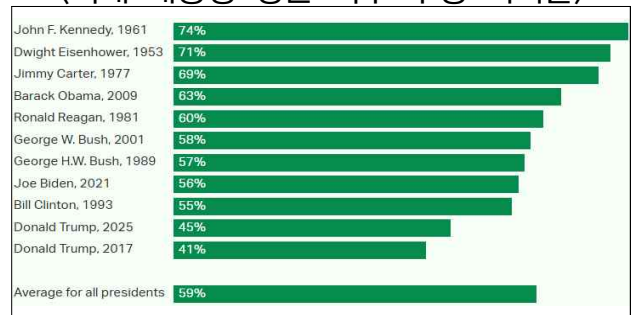
-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42%가 긍정, 52%가 부정 평가, 과거 1기 임기 초반 대비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트럼프 직무 수행 평가(4.27. 기준)>



[자료] YouG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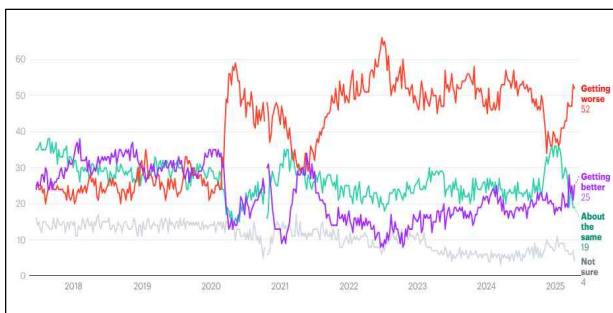
<역대 대통령 평균 직무 수행 지지율>



[자료] 갤럽(Gallup)

- 경제 전반에 대해 임기 초반 대비 부정적 인식(경제 61%, 관세 정책 64%, 금융 67%)이 지속 확대되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운용 신뢰도 약화
 - 대외무역 정책 관련 부정적 응답(61%)이 긍정적 응답(38%)을 상회, 응답자 64%는 관세정책이 경제 및 소비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 경제 운영에 대한 평가>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트럼프 행정부 추진 주요 정책별 평가>

정책	긍정	부정
이민	46%	53%
연방정부 운영	42%	57%
중산층 경제적 이익 보호	41%	58%
경제	39%	61%
대외 경제 협력 및 통상 관계	38%	61%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	34%	64%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	31%	67%

[자료] ABC, 워싱턴포스트, Ipsos poll

나. 금융시장 반응

-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 불확실성 심화, 재정 긴축 기조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
 -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및 연준 금리 인하 압박 발언 직후, S&P500(-2.3%), 나스닥(-2.5%), 다우존스(-2.4%) 등 주요 주가지수 일제 하락⁵⁷⁾
 - 골드만삭스, JP모건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2분기 S&P500 기업 순이익 전망치 8%p 하향 조정⁵⁸⁾
 - **(달러화)** 달러지수(DXY)는 98.2로 하락하며, 유로화 대비 5.2% 평가 절하되는 등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도 약화 조짐 관측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실물경제 충격 발생 시 추가 달러 약세 가능성 시사⁵⁹⁾
 - **(채권)**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413%(+8.2bp)을 기록, 2001년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하며, 미국 재정에 대한 신뢰 약화 우려 반영⁶⁰⁾
 - 월가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 확대에 의한 국채시장 불안 심화 가능성 경고
 - **(글로벌 영향)**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며, 변동성 급등, 원자재 가격 급등락, 신흥국 통화 약세 등 부정적 파급효과 심화
 - 국제유가는 수요 둔화 우려로 63.48달러까지 하락한 반면, 금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로 온스당 3,417.62달러(+2.1%)로 상승(4.21 기준)
 - IMF는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과 대규모 자본유출 리스크 확대 가능성 경고

57) <https://www.nytimes.com/2025/04/21/business/trump-tariffs-stock-markets.html>

58) <https://www.cnn.com/2025/04/10/investing/us-stock-market-dow-tariffs/index.html>

59) <https://www.cnn.com/2025/04/16/economy/fed-chair-jerome-powell-tariffs/index.html>

60) <https://www.reuters.com/business/finance/us-stocks-extend-slide-trump-haranges-powell-sp-500-down-3-2025-04-21/>

다. 업계 반응

- 미국 내 업계는 관세 인상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비용 구조 변화, 가격 조정, 해외 보복 관세, 시장 대응 전략 수립 필요성 제기
 - (원자재) 철강·알루미늄 업계는 수입 대체에 따른 단기적 손해가 기대되는 반면, 주요국 대응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공급망 재편 가능성 병존⁶¹⁾
 - (자동차)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를 고려할 때,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와 미국 내 생산 확대 필요성에 주목⁶²⁾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별 대응〉

업체명	기업별 대응
볼보	· 미국 트럭 공장 인력의 10%를 감축한다고 발표하며 생산 조정 착수
포드	· 중국발 차량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공급망 재구축 방안 모색
아우디·재규어	· 미국향 수출 계획을 철회하며, 대체 시장 발굴 주력
마쓰다	· 캐나다 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북미 생산전략 재편 돌입
닛산	· 일본 내 생산 물량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해 현지화 비중 확대
혼다	·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 발표

[자료] Automotive News

- (기술·전자) 전자제품(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주요 생산 거점이 중국에 집중된 만큼, 단기간 내 미국 내 제조 전환이 제한적이라고 평가
 -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면제 조치가 유지될 경우 관세 부담은 완화되나, 향후 232조 관세 적용 시 추가 리스크 발생 가능성 제기⁶³⁾
- (소비재/식품)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전가될 경우, 주요 품목 가격이 최대 30~40% 상승하며 수요 위축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 표출
 - 월마트, 타겟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단기적 대응으로 재고 선확보에 주력
- (의약품 및 바이오) 일부 바이오·의약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원가 상승, 추가 관세 검토에 따른 불확실성 지속

61)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4-03/commodities-hit-as-trump-s-tariffs-threaten-demand-and-economy>

62) <https://www.autonews.com/manufacturing/an-trump-tariffs-new-trade-reality-0425/>

63) <https://www.wsj.com/tech/trump-tariff-tech-exemptions-trade-uncertainty-dd8eb31f?st=JxYNqS>

2 | 현지 기관 평가

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인상은 단기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 고용, 수출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⁶⁴⁾
 - 15%p 관세 인상 시 10년간 약 3.2조 달러의 순 세수 증가 예상되나, 외국의 보복 관세가 동반될 경우 순 세수 증가 폭은 1.5조 달러로 축소
 - 관세 인상은 향후 10년간 GDP, 투자, 고용, 실질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초기 2년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불가피
 - 농업, 광업, 제조업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격에 노출될 전망이며, 무역상대국 보복 시 피해 심화 가능성 제기

나. 예일대학교 Budget Lab

- 신규 관세 조치는 단기적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확대, 산업 성장 저해, 소득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 초래 가능성 제기⁶⁵⁾
 - 평균 유효관세율이 28%로 19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비자 물가 4.6% 상승, 가구당 실질 구매력 최대 4,900달러 감소 전망
 - * 신발(+87%), 의류(+65%), 신차(평균 7,400달러 인상) 등 가격 급등 예상
 - '25년 4분기 기준 실질 GDP 1.1%포인트 하락, 고용 77만 명 감소, 수출 16.3% 감소로 연간 약 1,800억 달러 경제 손실 발생 예상
 - 관세의 역진적 특성으로 인해, 하위 2분위 가구의 연간 손실액은 2,200달러로 상위층보다 2.5배 높아 저소득층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

64) <https://www.piee.com/publications/piee-briefings/2025/us-revenue-implications-president-trumps-2025-tariffs>

65) <https://budgetlab.yale.edu/research/state-us-tariffs-april-15-2025>

다. 국제통화기금(IMF)

- IMF, 고율 관세 및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⁶⁶⁾
 - 세계 경제 성장률을 '25년 2.8%, '26년 3.0%로 각각 0.5%포인트 하향 조정
 - 관세 인상 및 공급망 비용 상승에 따라 '25년 세계 인플레이션을 4.3%(+0.9%p), '26년 3.6%(+0.6%p)로 상향 전망
 - 주요국 전반의 성장률 하향 및 교역 둔화 가속화 전망
 - (세계) '25년 교역 증가율 1.7%로 기존 전망 대비 1.5%p 하락
 - (미국) 성장률 1.8%(-0.9%p), 인플레이션 3.0%(+1.0%p), 경기침체 확률 37%
 - (아시아) 중국 4.0%(-0.6%p), **한국 1.0%(-1.0%p)**, 일본 0.6%(-0.5%p)
 - 탈세계화 가속 및 글로벌 무역 질서 약화 가능성 제기
 - 미국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글로벌 무역 질서 복원을 위한 구조개혁 및 다자주의적 협력 필요성 강조

라.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 무역 정책 혼선으로 미국 경제 안정성 및 대외 신뢰도 약화 전망⁶⁷⁾
 - 조약 의무 이행 방식과 경제정책 목표(제조업 육성 vs. 협상 지렛대) 불확실성으로 외국 정부 및 글로벌 기업 신뢰도 저하
 - 평균 관세율이 22%를 초과하며, 가구당 연간 약 4,600달러 추가 부담 발생 및 주요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중산층에 집중적 영향 예상
 -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조업체는 비용 상승 및 수출경쟁력 약화로 고용 부담 가중 가능성 제기

6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5/04/22/world-economic-outlook-april-2025>

67) <https://www.americanprogress.org/article/100-days-of-the-trump-administrations-foreign-policy-global-chaos-american-weakness-and-human-suffering/>

3 시사점

□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심화 및 비용 증가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 정책 변동성 등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글로벌 전략 수립 난망
 - 블룸버그 무역불확실성지수(BTU) 10.0으로 급등, 트럼프 1기 최고치 (4.58)를 넘어 사상 최고치 기록⁶⁸⁾
 -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급격한 변화(whipsaw)로 78%의 기업이 '25년 투자 계획을 동결 또는 연기⁶⁹⁾
-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도 증가
 - Vizion 통계에 따르면, 4월 2일 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해상 화물 예약 50% 급감, 미국의 대중 수입 36% 감소, 이에 따라 공급망 재편 가속 및 연간 15~20% 수준의 물류비 상승 예상⁷⁰⁾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물류 수요 및 비용 변화 추이 ('25.1~4월)〉

구분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25년 4월 (관세 발표 후)
블룸버그 무역불확실성 (BTU) 지수	4.58	6.2	8.5	10.0
글로벌 해상 화물 예약 감소율(%) ⁷¹⁾	0	10%	30%	50%
물류비 상승률 예상 (연간, %)	0	10%	25%	36%

[자료] 블룸버그, UN trade & development

-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 수출 바우처를 활용한 비용 지원, 공동물류센터 등 현지 인프라 및 관세 조치 컨설팅 지원 등

68)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5-04-01/supply-chain-latest-trade-uncertainty-hits-a-record-high>

69) <https://www.bloomberg.com/news/newsletters/2025-04-10/supply-chain-latest-trump-trade-policy-re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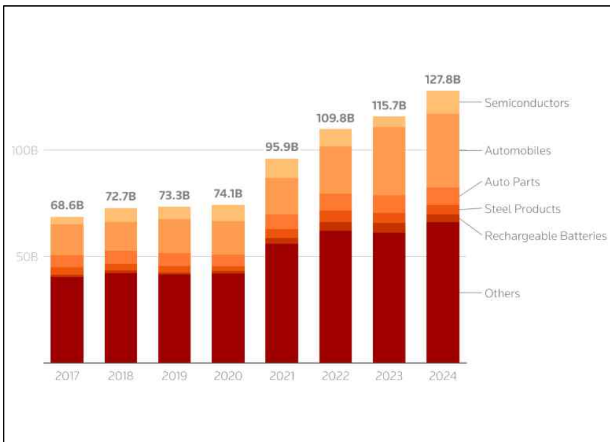
70) <https://www.businessinsider.com/trump-tariffs-increase-prices-empty-shelves-timeline-supply-chain-holidays-2025-4>

71) <https://unctad.org/news/trade-tensions-and-rising-uncertainty-drag-global-economy-towards-recession>

□ 미국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필요

- 미국의 관세 및 규제 강화로 대미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등 핵심 품목이 직접적 영향권에 포함
 - 주요 수출 품목의 대미 수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 및 수입 규제 동향 등 수출 구조 재편 가능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 가격 인상에 따른 미국 내 수입품 수요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망품목 발굴 및 상품·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

〈연도별 주요 대미 수출 품목 비중 변화〉



[자료] 로이터

〈대미 수출 상위품목('24년 기준)〉

순위	품목	금액	비중	전체 비중
1	자동차	73	20,360	14%
2	기계	71	18,440	12%
3	반도체	69	18,192	12%
4	자동차부품	71	16,174	11%
5	철강	20	14,739	10%
6	컴퓨터	53	11,887	8%
7	석유	20	7,305	5%
8	가전	5	5,310	4%
9	의약품	30	4,425	3%

[자료] 관세청 수출입 통계

□ 공급망 및 원산지 규정 강화 관련 리스크 점검 필요

- 해외 기업 대상 미국의 현지화 유도 기조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
 - 미국은 관세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외 기업의 현지 생산 및 투자 확대에 따른 미국 내 공급망 구축 및 현지화를 유도하고 있음
 - 미국산 우선 구매 기조 역시 확대될 전망으로 미국산 조달 전략 수립이 필수 과제로 부상중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및 USMCA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있으며,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절차 적용⁷²⁾
 - 부정확한 원산지 표기 또는 중국·베트남 등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적발 시, 2차 제재(Secondary Tariffs) 및 관세 추징 리스크 증가⁷³⁾

□ 미국과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 한-미 간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및 기술동맹이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
 -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 및 기술경쟁력 제고가 보호주의 완화 및 관세 예외 확보의 실질적 지렛대로 작용⁷⁴⁾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CHIPS법 시행 이후 '25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액이 64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기업의 투자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⁷⁵⁾

〈한미 기술동맹 5대 핵심 협력 분야〉

협력 분야	실천 과제
반도체	공급망 공동 구축, R&D 협력, 미국 내 대규모 투자
배터리	북미산 광물·부품 조달, 합작공장 설립
AI·디지털	공동 R&D, 표준화, 인재 교류 강화
바이오·우주	공동 연구센터 설립, 전문 인력 양성
경제안보	수출통제 강화, 한미일 3국 기술협력 추진

- 양국 간 견고한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관세 등 미국 내 정책적 조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72) <https://www.braumillerlaw.com/origin-verification-procedures-preferential-tariff-treatment-ptt/>

73) <https://www.bracewell.com/resources/post-liberation-day-secondary-tariffs-raise-costs-even-higher-for-international-actors/>

74)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11/building-a-new-us-korea-technology-alliance-strategies-and-policies-in-an-entangled-world?lang=en>

75) <https://www.piie.com/sites/default/files/2025-01/piieb25-1.pdf>

참고 1 | 트럼프 2기 정부 100일 무역 정책 타임라인 (5.12. 기준)

일자	내용	근거 법률	일자	내용	근거 법률
1.20. (발표)	· 미국 우선 무역정책 추진	대통령 각서	3.24. (발표)	·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25% 관세	IEEPA
2.1. (발표)	·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 중국 10% 관세 · 3국 대상 미소기준 종료	국제비상 경제수권법 (IEEPA)	3.26. (발표)	·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2.3. (발표)	· 캐나다 30일 관세 보류 · 멕시코 관세 보류	IEEPA	4.2. (발표)	· 전 세계 대상 기본 10% · 일부 국가 대상 추가 관세 · 중국 최소 관세 면제 철폐	IEEPA
2.4. (발표)	· 중국 10% 관세 · 중국 최소 관세 면제 종료	IEEPA	4.3. (발표)	· 완성차 25% 수입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2.5. (발표)	· 중국 최소 관세 면제 복원	IEEPA	4.5. (발표)	· 전 세계 대상 10% 상호관세	IEEPA
2.10. (발표)	· 전 세계 대상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발표	무역확장법 232조	4.8. (발표)	· 중국 50% 추가 관세	IEEPA
2.13. (발표)	· 전 세계 대상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호관세 발표	대통령 각서	4.9. (발표)	· 전 세계 대상 국가별 관세 보류 및 90일 동안 10% 관세 · 중국 125% 관세	IEEPA
2.21. (발표)	· 전 세계 대상 해외 직접 투자 정책 발표	대통령 각서	4.10. (발표)	· 중국 145% 관세 백악관 확인	IEEPA
2.25. (발표)	·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	4.11. (발표)	· 반도체 포함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제품, 일부 관세 면제	IEEPA
3.1. (발표)	· 목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	4.14. (발표)	· 반도체·제조 장비·의약품 국가안보 영향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
3.4. (발표)	·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 캐나다 석유/에너지 10% 관세 · 중국 10% → 20% 관세 인상	IEEPA	4.15. (발표)	· 핵심광물 국가안보 영향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
3.6. (발표)	· 캐나다/멕시코 USMCA 충족 수입품 관세 면제	IEEPA	4.17. (발표)	· 중국산 선박 입항 요금 조치	제301조
3.12. (발표)	· 전 세계 대상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4.23. (발표)	· 트럭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
3.20. (발표)	·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 증대	제301조	5.12. (발표)	· 對中 상호관세 및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 인하	IEEPA

[자료] 피터슨 연구소, ST&R, NBC News, NYT, PBS 및 기타 언론 종합

작 성 자

- 워싱턴 D.C. 무역관 이정민
 정연호
 김준희
 문현주
 정수나
 김경현

- 구미CIS팀 심솔리나

Global Market Report 25-012

발행일	2025년 5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 ISBN: 979-11-402-1359-7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